

‘광주시·의회 갈등’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점점 찾을까

‘중심상업지 용적률 완화’ 市 반발
내달 4일 의회에 재의 요구 시한
공개토론 합의 불구 전망 불투명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재검토를”
“현 용적률 도시재생 미흡” 주장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적률 상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이 공개토론에 합의 하면서 점점 찾을 지 주목된다. 토론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시의 재의 요구(거부권) 이후 의회 재표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시설 용적률 상향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전 시의회와 공개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기는 내주께로 논의됐고, 방식은 방송사 TV토론 혹은 의회 세미나실 현장토론 등 세부조율 중이다. 시는 해당 토론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재의 요구 발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에 대해 20일 내 재의 요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앞서 시의회는 제330회 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부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총장·급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사유로는 도심 공동화·상가 장기 미분양·상가 공실 해소 및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들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으면 정해진 토지에 더 높고 밀집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미분양을 가속할 수 있고 주거정책에도 역행하는 개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정주 및 교육환경

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위락·숙박시설 등 주거시설과 각종 유해시설이 혼재돼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정 도시계획조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다만 양측이 서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합의점 도출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는 시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했지만, 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 등 수개월 동안 시가 반대·대안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주 진행될 토론에서 마땅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달 말 시의 재의요구 이후 해당 사안은 두 차례 본회의를 거치는 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종 표결은 4~5월께 이뤄진다.

박필순 시의회 산건위원장은 “시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의회는 본회의 10일 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며 “논의를 해야겠지만 다음 본회의서 시정질문 등이 예정된 만큼 결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현재 시와 의회의 입장차가 크다. 그 안에 광주연구원에 의뢰한 도시계획 연구과제 결과 등이 나온다면 면밀히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조례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잘못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시의회 역시 도시계획·건축·사회환경 분야 등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발의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난개발을 가져올 이번 조례 개정안을 행정과 의회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광주시민의 주거의 질을 악화시키는 조례 개정 폐지안 발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청년들, 일 경험 상담하세요” 광주지역 청년들이 17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청년 일 경험 드림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취업 청년에게 현장에서 직무 숙련을 위한 일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유도를 목적으로 열렸다. 김양배 기자

지역-대학 동반성장 ‘전남형 RISE’ 본격 가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603억원 규모 5대 프로젝트 추진
김 지사 “청년 돌아오는 전남 앞장”

전남도가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RISE위원회를 열어 603억원 규모로, 5대 그랜드(Grand) 프로젝트와 15개 단위과제를 담은 ‘2025년 전남도 RISE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전남 RISE 시행계획은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GRAND 전남 혁신성장’을 비전으로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젝트(Global)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 프로젝트(Regional) △전문직업 평생교육 허브센터 프로젝트(Advanced) △초연결 공유캠퍼스 프로젝트(Nexus)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Dynamic) 등 ‘5대 GRAND 프로젝트’와 15개 단위과제를 대학, 혁신·연구기관, 산업체, 시군 등과 협력해 실행한다.

전남은 글로벌대학 등 지역대학 혁신동력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기반산업, 에너지·우주항공·해상풍력·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미래산업, 전국 최고의 농수산 경쟁력 및 관광문화자원, 도민의 높은 교육의식 등이 RISE 사업의 강점으로 뽑힌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3월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의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해 대학, 시군, 연구혁신기관과 여러 차례 설명회와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 혁신 주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업 수요 및 개선 의견을 반영한 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완성했다.

전남도는 19일부터 3월18일까지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신청받고, 3~4월 중 사업 수행 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매일 나오는 등의 급격한 변화 시대에 대학이 앞장서 산업현장 변화를 읽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과 함께 힘을 모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되는 전남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 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0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